

## Online Series

2023. 08. 20. | CO 23-23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

민 태 은(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이 기 태(국제전략연구실장)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8월 18일(미국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이 동북아 지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포괄적 네트워크임을 공식화했다. 이번 안보·외교·경제를 포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체 결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한 이번 3국 정상회의 및 양자회담을 평가하고 한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한·미·일 간 협회에 대한 공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미·일은 가치를 공유한 명실상부한 범지역 협력체라는 것이다.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경제, 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의 글로벌 문제에 포괄적으로 함께 대응할 것을 합의한 이번 정상회의는 4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것은 한반도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이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둘째, 한·미·일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연대라는 점을 재천명함으로써 3국 협력이 기존 국제질서와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안에서 3국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과 동시에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셋째, 군사·외교·안보 협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의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틀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도화 결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다. 이로써 보다 적시에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번 정상회의는 북핵문제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에서 북한문제가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3국이 지난 세 차례의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의제로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3국이 비확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미국은 핵억지력 제공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핵보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 양자회담 평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미일 정상회담 역시 각각 개최되었다. 각각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사항 중 향후 한·미·일 협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다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같은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한일은 대북제재 관련 자금줄 차단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 한·미·일이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제재 공조체제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공감하였다. 올해 들어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앞으로 한일은 북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군사협력에 합의하였다. 미일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개발을 추진 중인 극초음속무기를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요격체제, 즉 ‘활공단계요격용유도탄(Glide Phase Interceptor: GPI)’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현재 미일은 미사일의 탐지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소형위성을 연계시켜 운영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구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이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군사기술동맹’ 수준까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움직임을 향후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후속 조치

한·미·일 협력체와 연계되는 외교를 강화할 5가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포함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 도서국의 번영을 위해 해당 지역 국가에 대한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미중관계 밖에서 한국의 외교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우는 데도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아시아 중심성(centrality) 훼손을 우려해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 동참에 신중하다. 반면 최근 ‘성장’에 집중하면서 한류뿐 아니라 한국의 성장사려에 관심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외교영역을 확장하고 주도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의 역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아세안+3에 속한 한일이 함께 동북아를 벗어나 경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보다 가시화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내에서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나 제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대화 거부로 비핵화 진전이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내에서 인권문제를 보다 활발히 논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일과 함께 신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북한 위협을 포함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

기 위한 방안을 한일의 인태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일의 인태전략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한일 양국의 인태전략까지 논의할 수 있는 ‘외교·국방차관 전략대화’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일동맹 발전과정에서 미일이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영역에 향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일동맹의 군사기술동맹 발전 방향과 함께 ‘우주안보’와 같이 미일 간에 고도화, 제도화를 추구하는 동맹영역에 한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미일 양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한국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미·일 협력체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미일과 북핵위협 관련 감시 정찰 정보의 공유와 역할 분담, 3자 미사일 탐지 요격 훈련, 방산분야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급망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국이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보호, 3자 및 양자 간 자원 개발 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